

문) 다음 제시문은 국회입법조사처, 국토부에서 ‘청년주거’문제에 대해 분석한 자료이다. 다음 제시문을 참고하여,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청년 주거사다리 정책에 대해 찬성(유지 또는 확대) 또는 반대(축소 또는 폐지)의 입장에서 논하라.

[제시문 1]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직면한 주거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가격과 임대료,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극심한 주거난이 지속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내몰리거나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미래 계획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단순히 주거의 문제를 넘어 청년 세대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졌고, 실제로 최근 청년세대의 결혼,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주거비용 경감 정책으로 “청년 전용 행복주택, 전 월세 자금지원, 전세버팀목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분양 자금 대출, 주택구입 시 저리 대출, 역세권 청년 주택(서울), 따복하우스(경기)”과 청년 및 청년 계층이 대부분인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구입정책으로 “청년주택드림통장, 신혼부부집단보특별대출, 신혼부부 우선 특별공급” 등 주거사다리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막대한 세금이 특정 계층만을 위해 쓰인다는 점, 청년 가구 대부분은 수도권에 몰려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정책 효과가 불균형하다는 점 및 청년의 경제적 여건개선이나 높은 주거비 해결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제시문 2]

- 1) 19세 이상 34세 이하 지원 정책 :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청년가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가구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고,
19세 이상 39세 이하 지원 정책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청년주택드림통장,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공급, 역세권 전세 임대, 통합 공공 임대주택, 행복주택, 선택형 매입 주택 등이 있다.
- 2) 청년 주거사다리 정책 대부분은 2년 마다 소득을 조사하여 기준 충족 여부(보통 중위소득의 100~150%이내)를 다시 검토한다.
- 3) 청년계층 외 모든 국민이 대상인 주거정책으로 “생애최초 무주택자 특별분양공급”,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시세의 80%에 공급받을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중위소득의 48%이내)”, “국민임대주택(도시근로자 월 소득 70%이내)” 등이 있다.
- 4)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또는 면적 14㎡ 미만) 미달 비율은 2019년 기준 9%(수도권 11.3%, 비수도권 6.3%)로 일반가구 5.3%(수도권 6.7%, 비수도권 4.1%)에 비해 약 70%가 높았다.

5) 2021년 자가 보유 비율 :

청년가구(19~34세) 13.8%, 신혼부부(결혼 7년 이하) 43.9%, 일반가구 75.7% (전체 60.6%)

6) 2021년 공공임대 거주 의향 : 청년가구 52.1%, 청년 신혼부부 36.7%, 일반가구 24.3%

7) 2022년 임금근로자 연령별 평균 / 중위 월 소득, KOSIS

연령	평균 월 소득 (만 원)	중위 월 소득 (만 원)
20~24세	191	199
25~29세	287	266
30~34세	351	315
35~39세	409	351
40~44세	435	362
45~49세	440	333
50~54세	434	296
55~59세	392	260
60~64세	294	210
65세 이상	195	141

8) 2022년 인구동태 조사에 따를 때, 30대 미혼인구 비중은 1990년 6.8%(남성 9.5%, 여성 4.1%)에서 2020년 42.5%(남성 50.8%, 여성 33.6%)로 6.3배 급증하였다.

9) 2024. 1. 설문 : 34세 이하 청년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100명 복수응답)

- ① 경제적 여유 (월급, 집, 혼수, 결혼비용 등) 69%
- ② 적당한 상대가 없어서(외모, 조건 등이 마음에 차지 않는 등) 52.4%
- ③ 결혼할 필요성이 없어서 42%
- ④ 현재 직업, 학업에 열중하고 싶어서 28.1%
- ⑤ 독신의 자유를 잃고 싶지 않아서 27.5%

10) 2023년 청년 정책 예산은 약 24조원이다. 정부는 청년 주거비 정책이 청년 부동산 공급,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대출지원, 출산정책 등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과 혼합되어 있어, 청년 주거비 정책만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확한 청년 주거비 예산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청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국토부 예산(55조 7천 억 원) 중 일부는 청년을 위한 주택 분양 등을 위해 편성되었다.